

문명적 대전환을 위한

생명·생태 의제의 구체화와 시공간적 실천의 제언

- 정규호의 "생명, 생태를 시대적 가치로 삼아 광복 100년을 준비해 나가자"에 대한 토론문 -

토론자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 녹색불교연구소 소장)

1. 발표문의 의의와 주요 가치

본 발표문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앞두고, 과거의 관성적 발전 모델과 근대적 시간성에 갇힌 한국 사회에 '생명·생태'라는 가치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시의성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① '광복(光復)' 개념의 외연적 확장과 재정의

1945년의 광복이 식민 지배로부터의 '정치적 주권 회복'이라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면, 2045년의 광복 100년은 인류를 넘어 모든 생명과 생태계 전체의 공존을 도모하는 '근대문명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어떤 삶과 문명을 만들 것인가'로의 대전환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높습니다. 특히 3·1 독립선언서의 '공존공생권'과 백범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의 힘'을 생태문명 개척의 정신적 자산으로 연결한 맥락은 정당하며 그 의미가 큼니다.

② 근대적 '단기 시간성'과 '지연의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정치의 4~5년 단기 선거 주기, 자본의 분기별 실적주의, 미디어의 초·분 단위 자극 경쟁이 장기적 관점이 필수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는 근원적 장애물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시차가 큰 생태 위기의 특성상, 파국이 닥쳐서야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지연의 정치(politics of delay)'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새로운 시간 감각을 요구한 점은 본 발표의 가장 강력한 이론적 기여입니다.

③ '내파(內破)'하는 사회와 각자도생 구조의 연결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2024년 40대 사망원인 1위 등극)과 초저출생, 극단적 경쟁 구조, 심리적 양극화 등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 가치가 사회 운영 원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지표입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외적 요인이 아닌 시스템 내부에서 생명력이 소진되는 '내파'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기후 우울증 및 생태적 무력감과 맞물려 있음을 명확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④ '예시적 정치(prefigurative politics)'의 전략적 함의

미래의 대안을 '지금 여기'의 일상에서 미리 실험하고 실현하는 '예시적 정치' 개념은 추상적 전환 담론을 현장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마을공동체운동, 사회연대경제, 풀뿌리 주민자치 등 이미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실천 사례들이 이 개념 아래 더욱 명시적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교·기독교·천도교 등 종교 공동체가 오랫동안 쌓아온 생명 존중과 돌봄의 실천 자원은 예시적 정치의 문화적 토대로서 향후 더 적극적으로 소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⑤ '살림의 정치'와 새로운 정치 담론

진보와 보수의 낡은 이분법을 극복하고 생명·생태 가치에 기반한 '살림의 정치'를 제안하는 부분은 이번 발표의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시급한 주장입니다. 이 '살림의 정치'가 현 정치 지형에서 어떤 세력화의 경로를 가질 수 있는지, 기존 정당 정치와의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있다면 함께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2. 대전환의 실행을 위한 보완적 제안

발표문이 제시한 거시적 방향성과 담론의 완성도를 실천적 영역으로 견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의제들의 보완을 제안합니다.

① '공유지(Commons)' 관점과 '돌봄(Care) 사회'로의 결합 및 제도화

발표문에서 '사회·생태적 공유지'를 짧게 다루었으나, 이를 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대멸종은 대기, 물, 대기, 에너지 등 모든 생명의 '공통 자산'을 자본과 인간이 독점하고 사유화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2045년을 향한 사회적 약속에 '지구 공유지(Global Commons)의 회복'과 '공동 소유·공동 관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상품이 아닌 공유재로 다루는 법제화 방향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이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② '사회적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 구조 개혁 의제 도입

청년 세대가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고 '수저계급론'과 자산 격차에 절망하는 근저에는 독점적인 사회적 상속 제도가 존재합니다.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기회를 규정하는 세습 구조를 깨고, 축적된 부의 일정 부분을 사회 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상속 제도'나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자립 마중물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 같은 파격적인 의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포용과 공존'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해소를 위한 '마음행복부' 신설

영국의 경우, 국민의 14% 이상이 만성적 외로움을 느낀다는 진단 아래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신설하여 이를 국가 보건 및 복지의 영역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및 노인 자살률 1위, 과로사와 돌연사, 기후 우울증이 급증하는 한국 사회 역시 단순히 사회 시스템의 개선을 넘어 정신과 마음의 영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인간의 내면(마음)과 외면(환경)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칭 '마음행복부'를 신설하여 약물 처방 대신 지역사회 봉사, 예술, 여행 등을 연계하는 '사회적 처방'을 활성화하고, 도서관·공원·커뮤니티 센터 등 사회적 인프라를 관계 중심으로 재설계하며, 무한 경쟁 속 고독한 삶을 치유할 명상과 정신건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④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회'와 비인간·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심의위원회' 설치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나 아일랜드의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사례처럼, 공론 기구들이 도출한 합의안이 실제 국가 정책과 입법에 법적 구속력이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의제와 속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결합 방식을 정교화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주의를 극복하고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입법·사법·행정부에 준하는 제4의 독립기구로서 '미래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기구를 통해 모든 국가 정책을 미래 세대와 비인간 존재(자연)의 관점에서 심의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연의 권리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및 교육 현장에 미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상시적으로 생태적 사고를 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⑤ AI·기술 전환과 생명·생태 가치의 긴장 관계 정립

발표문 3절에서 AI와 로봇 등 신기술의 기회와 위험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생명·생태 가치와 어떻게 접합되는지 논리적 연결이 다소 아쉽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AI 3대 강국' 등 '강한국가 모델'이 생명·생태 가치와 어떻게 길항(拮抗)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자의 입장이 더 명료하게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AI가 생태 데이터 분석, 기후 예측,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유발하는 막대한 에너지·물 소비, 전자폐기물 증가 등 생태적 부담을 동시에 짊어냄으로써 기술에 대한 '생명·생태적 평가 준거'를 명확히 도입해야 합니다.

⑥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군비 확대가 아닌 평화 확대의 '녹색평화국가' 지향

인간의 탐욕이 아닌 필요에 근거한 성장, 자원의 무한 채굴에 의존하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생태적 가치를 고도화하는 '내포적 성숙' 중심으로 사회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남북 관계 역시 성장주의에 기반한 '대박 통일론'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살림과 공생을 기조로 하는 '녹색평화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군수산업 확대는 자칫 전쟁을 독려하는 군산복합체를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군비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라, K-문화와 K-생태사상을 통해 인류 문명전환의 대안으로서 평화를 확대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통일과 평화의 과정 자체에 문명전환의 비전이 장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향후 과제

① <광복100년 국민동행>은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20년 이상의 장기주의적 관점'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뜻깊은 기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비전은 가슴 설레는 희망을 주는 '장기적 거시 담론'이어야 함과 동시에, 그 실현을 위한 구체성은 사회적 통념을 깨는 '의외성과 파격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② 본 기구가 제안하는 '포용', '공존', '절제', '대화'의 가치가 관념적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 토론회 이후 전국의 마을 공동체, 사회연대경제 영역, 풀뿌리 주민자치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예시적 정치'의 사례들을 발굴하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③ 끝으로, 생명·생태 가치 중심의 전환 의제가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지려면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과 '제도 밖에서 견인하는 전략' 사이에서 시민사회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또한, '미래 인식의 상실'을 경험하며 각자도생하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이 생명·생태 가치의 의제가 어떤 언어와 방식으로 전달될 때 실질적인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끝)